

라디오의 정치: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

김희숙†

1. 들어가는 말

금성 라디오 A 504를 맑게 개인 가을날
일수로 사들여온 것처럼
오백원인가를 깎아서 일수로 사들여온 것처럼
그만큼 손쉽게
내 몸과 내 노래는 타락했다.
...
- 김수영, “금성 라디오”

1960년대 한국 사회를 지배한 매체는 라디오였다. 이는 라디오에 대한 당시의 소유욕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김수영의 시 “금성 라디오”(196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갖고 싶은 라디오는 도시의 가정을 넘어 농어촌으로도 확산되었다. 게다가 금성사는 국내에서 조립·생산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수입품보다 저렴한 국산 라디오를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기 시작했다. 라디오 시장은 확대되었고, 라디오 방송도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 결과 1970년대 중반 텔레비전이 대량 공급되기 전까지 전국적으로 라디오 방송의 영향력은 매우 높았다. 지역·세대·계층과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전국에 울려 퍼진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고, 이를 기억하고 있다.¹ 이렇게 1960년대 한국에서 라디오는 유례없는 황금기를 구가했고, 라디오

† 전북대학교, kimhisuk82@gmail.com

방송 청취는 그 시대의 전 국민이 공유한 경험이었다.

1960년대 한국의 라디오 보급은 독특한 현상이었다. 낙후된 경제 상황에도 도시에 한정되지 않고 농어촌까지 라디오가 확산되었다. 무엇보다 그 속도가 매우 빨랐다. 1964년 유네스코(UNESCO) 보고서를 보면, 개발도상국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설에 대한 최저 기준으로 인구 100명 당 신문 10부, 라디오 5대, 텔레비전 2대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² 이러한 권고가 나오기도 전, 한국은 1962년 말 무렵 라디오에 관해서는 이미 이 기준이 충족된 상태였다.³ 이렇게 라디오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농어촌의 문화적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 한국에서 라디오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동인과 보급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산 라디오가 생산되었지만 여전히 라디오는 고가의 제품이었다. 그렇지만 도시보다 경제적으로 더 낙후된 농어촌에도 라디오가 보급되었다. 사실 여기에는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1960년대 라디오의 전국적 확산이 개인의 선택이었다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사회적 운동의 결과였음을 의미한다. 왜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한 것일까? 농어촌에 라디오를 보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실행한 것인가? 이 글에서는 당시로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산물인 라디오가 농어촌에 전달된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라디오가 전달된 농어촌의 삶에 나타난 변화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은 아직까지 금성사의 성장이라는 측면 외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해 그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⁴ 그리고 일부 연구자가

¹ 신현준, “라디오 코리아”, 한국언론재단 편,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한국언론재단, 2007), 396-402.

² W. Schramm, *Mass Media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Role of Informat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를 김영희, “한국의 라디오시기의 라디오 수용현상”, 『한국언론학보』 47:1 (2003), 140-165 중 145에서 재인용.

³ 신문, 텔레비전은 1970년대 초반 이 기준에 도달했다. 같은 글, 145; 공보부 조사국, 『전국 라디오 보급 현황』 (공보부, 1963), 9.

⁴ 경영 위기에 직면한 금성사가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으로 라디오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사화됐고, 전자 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일부 회고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라디오 보내기 운동의 영향으로 금성사의 라디오가 1961년 9월 89만 3천 대에서 1962년 134만 대로 보급이 급증했다는 기록이 거의 여과 없이 인용되고 있다. 박원규, 『삼성 vs LG, 그들의 전쟁은 계속 된다』 (미래의창, 2007), 47; 조영호, 『가슴을 뛰게 하는 비즈니스 명장면 23』 (명진출판사, 2008), 49; 매일경제산업부, 『1등 기업의 비밀』 (매일경제 산업부, 2010), 128.

1960년대 라디오의 대량 공급은 공통되게 기술하지만 구체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김영희는 라디오 수신기가 대량 보급된 1950-70년대를 “라디오 시기”로 명명하면서, 보급 양상과 방송 청취 성향을 분석했다. 그리고 대량 보급된 데에는 국내 기업의 라디오 수신기 생산, 정부의 라디오 수신기 보급 정책 및 매체 활용, 라디오 방송 시설 확충과 민간 방송사 간 청취율 경쟁 체제 구축, 국민 소득의 증대 등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도시의 이야기로, 농어촌의 라디오 보급과는 거리가 있다.⁵ 윤상길은 1930-60년대 한국의 라디오 보급 양상을 분석했다. 그리고 1965년 농어촌 앰프, 스피커 보내기 운동이 실시되면서 도시는 무선 라디오, 농촌은 스피커로 라디오 방송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농촌의 라디오 청취 형태는 집단화되었다고 기술했다.⁶ 그런데 1960년대 중반 농촌에 앰프, 스피커가 대량 보급되었다고 설명한 반면, 1960년대 초반부터 농촌의 삶이 집단화, 공동화된 데에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다고 기술해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마동훈은 전북 화양 마을에서 라디오를 접한 개인의 체험을 민속학적으로 접근해, 1960년대 전후 농촌의 근대화를 설명했다.⁷ 그러나 개인의 체험에 집중하면서 라디오 보급에 대한 내용은 거의 기술되지 않았다. 한편 방송사 관련 연구는 1960년대를 라디오의 황금기로 평가했는데 라디오 드라마와 청취자의 수용 방식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라디오 자체의 보급보다는 1960년대 라디오 드라마의 영향을 주요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 글은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의 실행에 주목해 1960년대 전자 산업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자 산업 연대기는 1959년 금성사의 진공관 라디오 A-501 생산 이후 곧바로 1969년 전자공업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진다. 결국 1960년대 전자 산업에 대한 서술은 상당 부분 공백으로 남아있거나, 금성사가 당시 전자 산업 시장을 독점적으로 주도했다고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⁸ 이와 관련해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라는 사례를 분석

5 김영희, 앞의 글, 140-165.

6 윤상길, “1960년대 한국 라디오 테크놀로지의 ‘부라화’”, 한국방송학회 편, 『한국 방송의 사회문화사: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한울아카데미, 2011), 206-248.

7 마동훈, “초기 라디오와 근대적 일상: 한 농촌지역에서의 민속지학적 연구”, 『언론과 사회』 12:1 (2003), 56-91.

8 한국전자공업진흥회, 『電子工業二十年史』 (한국전자공업진흥회, 1980);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電子組合二十年史』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1987);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산업40년

함으로써 1960년대 전자 산업에서 금성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농어촌 공보에 필요한 최선의 수단, 라디오

1961년 5월에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공보부의 활동을 강화했다. 이는 박정희 정부가 직면한 상황을 감안하면 필요한 과정이었다. 최고 권력자로서 박정희는 자신의 행동과 역할을 정당화해야 했다. 조국 근대화를 구호로 내걸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⁹ 이렇게 박정희 정부는 권력 획득의 근거로 빠른 경제 성장을 내세웠고, 이를 통해 국내외의 비판에서 벗어나려 했다. 여기에 대중의 지지까지 얻게 되면,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기반은 탄탄해질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전 정부와 다른 박정희 정부만의 새로운 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려야 했고, 그 발판은 공보 강화였다.¹⁰

박정희 정부의 공보 강화는 행정 구조와 방송의 개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국무원 사무처 소속 공보국과 방송관리국을 통합해 공보부로 확대·개편했다. 독립된 중앙 부서로서 체제가 갖춰지면서 정부 공식 발표부터 업적과 시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등 기능도 확대되었다.¹¹ 그리고 1961년 6월 국무원 사무처 소속의 국영 서울중앙방송국(현재의 KBS)도 공보부로 이관되면서 매일 5분씩 총 18회에 걸쳐 ‘혁명 과업의 달성’을 주제로 한 계몽 방송을 실시했다. 오전 9

사』(한국전자산업진흥회, 1999); 서현진, 『끝없는 혁명: 한국 전자산업 40년의 발자취』(이비컴, 2001); 전자산업50년사 편찬위원회, 『기적의 시간 50』(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09); 김해수, 『아버지의 라디오』(느린걸음, 2007).

⁹ 당시 박정희 정부가 발표한 군사 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북괴 경제를 압도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이룩한다”라는 것이었다. “국가계획위 발족에 기대함”, 『동아일보』, 1961. 5. 24.

¹⁰ 박정희 정부가 민간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의 내용은 공보 요원의 교육용으로 발간된 『공보요원 PR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의 업적 및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공보부조사국, 『공보요원 PR자료』(공보부조사국, 1962).

¹¹ 1948년 정부조직법이 제정되면서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공보처가 발족되었다. 그러나 공보처는 1955년 대통령 직속 기관인 공보실로 개편되었고, 일부 업무가 내무부, 교무부로 이관되어 기능이 축소되었다. 1960년에 공보실이 폐지되었고 소관 업무는 국무원 사무처 공보국에서 담당했다. 이처럼 박정희 정부 이전까지 규모나 기능 면에서 공보 부처의 역할은 상당히 축소된 상태였다. 이철은, “문화관광부 조직 변천과 정책 방향 변화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11-12; 행정자치부, 『대한민국 정부조직 변천사-하』(안전행정부, 1998), 151-159.

시와 11시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내용이 보도되었고 오후에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8시 10분부터 20분간 국가의 발전상이 방송되었다.¹² 그리고 지역 문화 센터 공연, 영화 제작 등 다양한 방식을 공보에 활용했다.¹³ 군사 정부는 이러한 공보 기구 및 활동 강화를 혁명 2개월 동안의 업적으로 선정했다.¹⁴

1962년부터 박정희 정부는 농어촌 대상으로 공보 활동을 강화했다. 이전까지의 공보 활동은 도시가 중심이었다. 이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은 박정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¹⁵ 점차 도시와 농어촌 간 정보의 수준이나 내용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그러면서 농어촌 주민들은 사회, 정치의 급변과 무관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공보가 강화된 직접적인 계기는 1962년 2월 실시된 박정희 의장의 지방 순시로 볼 수 있다. 이는 농촌의 실정을 탐색함과 동시에 정부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¹⁶ 박정희의 지방 순시 직후 공보 자문 위원이 파견되었고, 농어촌에서는 공보 효과가 거의 없었음을 확인했다.¹⁷ 박정희와 공보 자문 위원들의 지방 시찰을 계기로 농어촌에서의 공보를 강화할 대책이 마련되었다.

농어촌의 공보를 강화하는 첫 단계는 공보부 장관의 교체로 나타났다. 1962년 6월 19일 오재경이 장관에서 해임되고 차관이었던 이원우가 공보부 장관으로 승진했다.¹⁸ 이원우는 장관 임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¹² 요일별로 당시 진행된 개발 사업과 혁명 이후 한국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다. 그리고 각 부처의 주간 업적 및 시책을 소개하는 등 박정희 정부의 업적을 알리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계몽 푸로를 대폭 강화: HLKA서 혁명과업 완수위해”, 『경향신문』, 1961. 6. 6.

¹³ “행정 전반에 걸친 시정책 건의”, 『경향신문』, 1961. 6. 28; “감찰위, 시정책 64개항 건의”, 『동아일보』, 1961. 6. 29; “명량한 생활”, 『동아일보』, 1961. 7. 18.

¹⁴ “필연적인 생존권 발동”, 『동아일보』, 1961. 8. 3.

¹⁵ 1962년 6월 3일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 성인의 뉴스 및 정보 습득 출처에 대한 전국 여론 조사가 실시되었다. 전체 응답자 2,724명 중 약 49%가 군사 정부의 민정 이양 공약 사실을 몰랐다. 국가재건국민운동은 34.1%,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48.7%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문을 통한 정보 습득은 도시에서는 51%이었던 반면 농어촌에서는 약 21%로 낮게 나타났다. 군사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간 정보 습득에 격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새 소식을 어떻게 아는가?”, 『경향신문』, 1962. 6. 3.

¹⁶ “박의장 지방순시 등정”, 『경향신문』, 1962. 2. 13.

¹⁷ 공보부는 자문 위원으로부터 지방 공보 강화와 중농정책 시행이 병행되었음에도 중앙과 지역의 성과는 큰 격차가 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지방 공보 실태 등 파악”, 『경향신문』, 1962. 3. 4.

¹⁸ 장관 교체 직전 오재경은 농어촌 공보 강화를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지방 방송 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두 개의 방송 중계소 신설 및 기존 시설의 보수 예산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지방 방송 시설”, 『경향신문』, 1962. 6. 15; “박의장이 수반직 잠정 겸임”, 『동아일보』,

공보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은 방송 체계의 개편을 통한 서울과 농어촌 방송의 분리였다. 여기에 국민운동본부, 농협, 농촌진흥청, 지방행정관청의 공보 기관을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¹⁹ 이렇게 박정희 정부는 공보부장관의 교체라는 표면상의 변화로 농어촌 공보 강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두 번째 단계로 도시와는 다른 농어촌에 적합한 새로운 공보 매체를 확보하고자 했다. 박정희 정부는 처음부터 공보 매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1961년부터 꾸준히 실시된 공보부의 매체 실태 조사로 알 수 있다.²⁰ 매해 실시된 전국 매체 실태조사를 보면 공보부는 잡지·신문·라디오·텔레비전 등을 활용했을 때, 소요 비용·전달 속도·대중의 정보 습득 정도를 검토했다.

매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잡지와 신문은 배포의 신속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간행물이 서울에서 강원, 충북, 충남 지방까지 전달되는 데 대체로 2-3일이 걸렸다.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지역은 약 5-7일, 제주도는 7-10일이 소요되었다. 읍, 면까지는 간행물이 배포되기 시작한 후 평균 15일 이상 걸려야 각 지역에 도착했다.²¹ 이러한 간행물의 전달 속도 때문에 농어촌 공보 매체로 적합하지 않았다.²² 그리고 또 하나의 난점이 있었다. 바로 한자 문맹률이었다. 사실 한글 문맹률은 1958년에 이미 4.1%에 불과했다.²³ 그런데 당시 간행물은 한자가 혼용되어 있어서 중학교 교육 이상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해독하기 어려웠다. 이에 1961-62년 간행물의 한글 전용에 관한 논쟁이 수차례 있었지만 쉽게 실현되지 않았다.²⁴ 때문에 한자에 미숙한 사람들이 간행물을 읽는 것은 불가능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배포할 수 있지만 느린 전달 속도와 낮은 해독률로 농어촌 공보 수단으로 간행물을 활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그렇다면 공보 수단으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남았다. 텔레비전의 활용 가

1962. 6. 19; “극적 발언 없이 이임”, 『동아일보』, 1962. 6. 20.

¹⁹ “농어촌의 공보 강화는 어떻게”, 『경향신문』, 1962. 7. 7.

²⁰ 김영희, 앞의 글 (각주 2), 162-163.

²¹ 공보부조사국, 『전국 홍보 선전 매개체 실태 조사 총평』 (공보부, 1961), 25-26.

²² 같은 책, 81.

²³ 허만길, “광복 후의 문맹 퇴치 정책 연구”, 『교육 한글』 7 (1994), 175-197.

²⁴ “월일은 신문의 날”, 『동아일보』, 1961. 4. 4; “경향신문 창간 15주년 기념 5대 사업”, 『경향신문』, 1961. 9. 18; “한글 전용에 관한 시비론”, 『동아일보』, 1961. 12. 18; “한글 전용 시비”, 『경향신문』, 1962. 1. 8; “한글만 쓸 때는 왔다(상)”, 『동아일보』, 1962. 1. 23; “한글만 쓸 때는 왔다(하)”, 『동아일보』, 1962. 1. 24; “과감한 문자 개혁을”, 『경향신문』, 1962. 1. 24; “한글 전용은 단행돼야 한다”, 『경향신문』, 1962. 5. 30.

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부터이지만, 매체 특성상 처음부터 보급에 난제가 있었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금성사 라디오는 2,000-2,500원에 거래되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금성사 직원 월급이 6,00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라디오도 선뜻 구입하기 어려웠다.²⁵ 그런데 텔레비전 가격은 라디오의 수십 배였다.²⁶ 게다가 1961년 12월 31일 KBS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했지만, 평균 주당 방송 시간이 채 30시간도 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불규칙했다.²⁷ 그리고 농어촌에는 전력도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농어촌에 텔레비전을 보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²⁸

텔레비전을 농어촌에 보급할 수 없는 이유는 더 있었다. 바로 1961년 7월 박정희 정부가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법’을 공포했다는 점이다. 이 법에 따르면 텔레비전, 선풍기, 트랜지스터 라디오, 진공관 라디오(6구 이상 제외) 등의 외국산 전자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었다.²⁹ 이 법이 공포된 상황에서 정부 부처인 공보부가 나서서 텔레비전을 적극 보급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였다. 즉, 처음부터 텔레비전은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농어촌에 적합한 공보 수단을 고려할 때 박정희 정부의 최선의 선택은 처음부터 라디오였다. 게다가 ‘국산 라디오’가 생산되고 있었다.³⁰ 최초의 국산 라디오로 평가받는 A-501이 1959년 11월 15일 처음 생산된 이후 금성사에서는 2-4개월 단위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있었다.³¹ 여전히 고가이지만, 국산 라디오를

²⁵ 금성사의 라디오 A-501은 2만환으로 출시되었다. 이후 대량 생산되면서 가격이 하락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1962년 화폐 개혁으로 구권과 신권이 10:1로 교환된 결과였다. 금성사, 『금성사 이십오년사』 (금성사, 1982), 155, 184.

²⁶ 당시 텔레비전 광고에 게시된 가격은 최저 13만원부터 최고 30만원이었다. “가정용 테레비의 결정판!”, 『경향신문』, 1962. 2. 17; “산요 테레비는 세계의 테레비”, 『경향신문』, 1962. 2. 18; “NEC 테레비 10개월 일부 공급 NEC최신형으로” 『경향신문』, 1962. 3. 27; “HITACH 일립 테레비 염가판매!”, 『경향신문』, 1962. 3. 28.

²⁷ 한국방송공사 편집위원회, 『한국방송사』 (한국방송공사, 1977), 523-539.

²⁸ 김연희, “농촌 전기공급 사업과 새마을 운동”, 『역사비평』 97 (2011), 397-425.

²⁹ 군사 정변 발생 6일전 1961년 5월 10일 특정 판매 금지 법안이 처음 공포되었고 8월 31일까지 외래품 정리 기간으로 설정된 상태였다. 군사 정변 이후 1961년 7월 14일 특정 외래품 금지 법안이 재공포되었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었다. “특정 외래품 판매법 공포”, 『경향신문』, 1961. 5. 11; “통관 표식하기로-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 법안”, 『경향신문』, 1961. 7. 15; “혁명과 소비-외래품”, 『경향신문』, 1961. 9. 1.

³⁰ 금성사의 라디오 A-501은 약 60%의 부품을 국내 생산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핵심 부품은 외국의 것을 사용했다. 이에 A-501을 ‘국산’ 라디오로 여긴 것은 다른 기업의 라디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산에 가깝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금성사, 앞의 책, 153-157.

활용한다면 높은 공보 효과를 얻을 것이라 기대했다. 게다가 라디오의 신속성과 동시성은 정부가 공보 수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대의 수신기에 전선, 스피커를 각 가정으로 연결하면 수십에서 최대 수백 명까지 동시에 듣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정보 전달을 기준으로 볼 때 라디오는 가장 적합한 매체였다. 게다가 정부가 알려려는 소식이 청취자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장점도 지녔다. 신속성과 정확성의 측면에서 라디오는 박정희 정부의 입장과 소식을 시의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다.

3. 라디오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들

박정희 정부는 공보 효율의 측면에서 라디오의 가치를 인식했지만 실제 보급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승만 정부의 라디오 보급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다. 농촌에 라디오를 처음 무상 보급한 것은 이승만 정부였다. 1959년에 공보를 위해 ‘농촌 라디오 앰프존 조성’이라는 계획에 따라, 약 400여 대의 라디오를 전달했다.³² 그러나 혜택은 고르지 않았고,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 직전 보급되어 오히려 ‘선거 대비용’이라는 비판이 있었다.³³

이에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라디오 보급 방안을 착안했다. 바로 ‘도시·농어촌 간 자매 결연 운동’이었다. 1961년 9월 18일 공보부는 문화 시설이 없는 농어촌과 도시 사이의 결연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매 결연 운동은 도시의 단체와 신문, 라디오, 전기 시설 및 교회 등이 없는 곳, 교통이 불편한 곳, 생계가 자급자족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이 연결되면, 도시에서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1대와 각종 도서를 농어촌으로 전달한다는 것이었다. 농어촌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도시로 보냄으로써 그에 보답하는 방식이었다.³⁴ 이러한 자매 결연 운

31 금성사, 『이십오년사』 (각주 25), 177-178.

32 “국무회의록-농촌 라디오 보급에 관하여”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BG0000114, 1959); “농민들에 라디오 듣도록 앰프존 확대안 드디어 실현”, 『동아일보』, 1959. 4. 21; “라디오 2만대 각 농촌에 설치-공보실서 계획”, 『동아일보』, 1959. 8. 19; “당국서 사개년계획 추진”, 『동아일보』, 1960. 3. 5.

33 농촌에 무상 보급된 라디오를 ‘과거 구 자유당에서 3·15선거에 대비키 위하여 선전책으로 농민의 호감을 사려고’ 보급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충청북도 공보관, “유선 방송 수신기 보급 1962”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BA0845734, 1962).

34 자매결연은 서울의 학교, 신문사, 교회, 금융 기관, 국영 기업체 및 공공 기관 등이 농어촌을

동으로 정부의 정치적 의도는 드러나지 않은 채, 라디오 보급을 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는 자매 결연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연만 맺을 뿐, 실질적인 교류는 거의 없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³⁵ 농어촌·도시 간 자매 결연이 강제성을 띤 방안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새로운 시도는 보급의 형태나 지속의 측면에서 역부족이었다.

농어촌에서는 라디오 청취가 여의치 않다는 사실도 보급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했다. 대부분 농어촌에서는 방송, 전기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라디오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공보를 목적으로 라디오를 보급하려면 적합한 환경이 갖춰져야 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는 방송 자체의 통제에 우선 착수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 시설부터 내용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공보부에 일임되었다. 그 근거는 1961년 8월 24일 제정된 “유선방송 수신관리법”(법률 제692호)이었다. 이 법 5조에 의해 공보부는 난립 상태인 민간 유선 방송 시설을 정리했다.³⁶ 유선방송 수신관리법은 농어촌 지역의 방송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안이 아니었다. 오히려 방송 자체에 대한 통제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공보부는 기존 민간 유선 방송 시설을 정리했고, 서울중앙방송국(KBS)과 새로운 민간 유선 방송인 한국문화방송(MBC)의 청취만을 허용했다. 민간 방송을 운영해온 기존 사업자들은 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새로 받아야 했다. 그리고 국영 방송국의 방송만 중계 및 재방송, 개별 지역 공지 방송(광고 불허),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체 방송만 가능했다.³⁷ 공보부는 라디오 방송의 범위와 내용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난립 상태의 민영 방송을 일거에 정리함과 동시에 정부가 원하는 방송만 허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방송 통제와 동시에 송신소 시설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주거 지역에 따라 KBS, MBC 방송보다는 북한, 중국, 일본의 방송이 더 또렷하게 들리는

상태로 해서 맺게 되었다. 각 중앙 기관에서 농어촌 부락에 라디오 한 대를 기증하며, 배터리, 각종 도서 및 신문, 의류 및 일부 선물을 보낸다. “도시와 농어촌 상호 자매결연 운동 균등한 문화 지향”, 『동아일보』, 1961. 9. 19; “문화 시설 없는 농어촌과 결연”, 『경향신문』, 1961. 9. 18.

³⁵ “맺어만 놓은 자매결연”, 『경향신문』, 1962. 1. 6; “휴지통”, 『동아일보』, 1962. 1. 29; “자매결속운동 성과와 시점”, 『경향신문』, 1962. 8. 3.

³⁶ 윤상길, “1960년대 초 한국 유선라디오 방송제도의 성립과 발전-공보부와 체신부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5:1 (2011), 159-204.

³⁷ 총무처, “관보-유선방송수신관리법(법률제692호)”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BA0188682, 1961); “HLKV 한국문화방송 개국”, 『경향신문』, 1961. 11. 8.

곳도 있어 문제가 되었다. 공보부는 전국 방송 송신 시설을 확대해 한국 라디오 방송의 가청 범위를 넓히고자 했다. 이에 남양 송신소와 제주도 서귀포 송신소 준공, 부산 송신소의 출력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³⁸ 공보부는 송신 시설이 확충되면 일부 지역의 난청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1962년 9월 10일 남양 송신소가 개설되면서 실현되었다.³⁹ 이처럼 박정희 정부는 농어촌을 위한 환경 개선은 아니지만, 방송 시설을 통제·확대해 전국에서 라디오 방송 청취가 가능하게 만드는 데 공을 들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력 문제는 농어촌의 자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했다. 도시에서도 운반체로 전기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송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⁴⁰ 이에 농어촌에서는 자체적으로 소형 발전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사노리에 수력 발전소가 세워졌다. 이는 시조사(時兆社)의 전기 기술자 김문웅이 주도해 실현한 것이었다.⁴¹ 사노리처럼 소형 발전기를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농어촌의 생활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⁴² 물론 라디오 방송 수신을 위해 소형 발전기가 건설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라도 농어촌에서 라디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만들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방송이나 전력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공보부는 본격적으로 농어촌에 라디오를 무상 보급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유선방송관리법에 근거해 라디오가 없는 지역을 모범 마을(모범면)과 미지정 마을로 구분해 보급할 예정이었다. 물론 지원 규모는 지정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벌어졌다. 모범 마을로 지정되면 정부, 도, 군의 공보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주민의 자금과 인력을 더하여 앰프, 라디오, 스피커 등 시설 전반을 갖추 수 있게 될

³⁸ 한국방송공사, 앞의 책 (각주 27), 705-709; “서귀포에 송신소”, 『경향신문』, 1961. 12. 7; “KB 출력강화 가청구역 넓어진다”, 『동아일보』, 1961. 12. 12; “500KW의 남양 맘모스 송신소 준공”, 『경향신문』, 1962. 4. 9.

³⁹ 이인관, “남양송신소 500KW 송신기 시설 현황”, 『대한전자공학회』 1:1 (1963), 91-98.

⁴⁰ 농어촌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된 것은 “농어촌전화촉진법”(법률 제1737호)가 제정 이후부터이다. 총무처, “관보-농어촌전화촉진법(법률 제1737호)”,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BA0100006, 1965); “가정등일시간씩 단전”, 『동아일보』, 1961. 3. 31.

⁴¹ “사노리에 익어가는 광명의 꿈, 사재로 발전시설”, 『동아일보』, 1961. 8. 20.

⁴² “지역개발에 큰 역군, 식산포장에 빛나는 독농가”, 『경향신문』, 1961. 10. 10; “농민들 손으로 수력발전소”, 『동아일보』, 1961. 11. 12; “희망시대-지리산에 메아리친 건설의 고동”, 『경향신문』, 1962. 1. 11; “오막살이를 밝힌 전등”, 『경향신문』, 1962. 4. 25; “산골짜기에 수력발전소”, 『경향신문』, 1962. 7. 12.

것이였다. 반면 미지정 마을은 유선 방송 수신 허가를 신청한 후 라디오만 보급 받을 수 있었다. 앰프, 스피커 등의 시설과 설치 비용 대부분은 해당 마을의 주민의 몫이였다.⁴³

그런데 라디오를 신청한 마을의 숫자가 공보부의 예산을 넘어섰다. 공보부는 지역 별로 라디오 없는 마을을 새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유선 방송 수신 허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경기도 2천 3백 대, 충북 1천 대, 충남 1천 2백 대, 전북 2천 6백 대, 전남 4천 2백 대, 경북 2천 4백 대 등, 전국으로 확대하면 약 1만 5천 대가 필요했다.⁴⁴ 그런데 공보부에는 이를 충당할 예산이 없었다. 앰프와 스피커는 차치하고, 라디오만 보급해도 감당되지 않을 규모였다.

결국 농어촌 공보 개선에 가장 중요한 자원인 라디오를 대거 충당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그렇다면 당시 전국에 라디오는 어느 정도 보급된 상황이었을까? 공보부가 1961년 9월 3일부터 열흘 간 매체 보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 라디오 보급률은 평균 55명당 1대로 나타났다.⁴⁵ 1962년까지도 라디오 보급 분포나 규모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전국 라디오 보급 현황표 (단위: 대)

	전국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축	37,833	3,555	935	1,819	1,954	3,092	4,132	5,028
전기용	223,340	24,599	6,912	14,455	12,065	10,853	15,592	30,242
건전지용	99,735	17,772	3,967	9,422	7,459	5,912	8,852	13,272
비용	32,422	2,976	849	2,402	1,495	1,468	3,503	8,046
트랜지스터	81,626	14,077	2,081	6,303	6,272	6,977	7,691	12,364
광석식	51,689	13,617	1,089	6,113	7,549	2,436	3,756	3,877
스피커	107,740	26,835	6,599	12,090	7,295	6,294	22,690	9,223
기타	8,373	1,527	540	557	562	417	1,616	1,449
합계(S)	642,758	104,958	22,972	53,161	44,648	37,449	67,532	83,501
인구수(P)	24,994,117	2,758,027	1,369,913	2,525,646	2,395,023	3,553,475	3,850,102	4,179,202
1대당 인구 수 (P/S)	55	26	56	47	53	95	57	50

출처: 공보부 조사국, 『전국홍보선전매개체실태조사 총평』(공보부, 1961), 122-125.

43 충청북도 공보관, “유선방송 수신기 보급”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BAO845734, 1962).

44 같은 자료; 경상북도 기획관리실 문화공보담당관, “유선방송 수신사업 허가”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BAO181042, 1962).

45 1962년 공보부의 실태 조사 결과는 부족한 라디오 수만 기재되어, 전국 라디오 보급 현황은 1961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공보부 조사국, 『전국 홍보 선전 매개체 실태 조사 총평』(공보부, 1961), 122-125.

<표 1>은 전국 라디오 보급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구 100명당 2대꼴로 라디오가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직접 방송 수신이 가능한 것은 전축, 전기용, 건전지용, 병용, 트랜지스터, 광석식 라디오이다. 이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청취 수단에 스피커가 포함된 점이다. 공보부는 단순히 소리만 들려주는 스피커를 한 대의 라디오 수신기로 간주한 것이다. 게다가 스피커의 보급률은 약 17%를 차지했다. 라디오 보급률에서 스피커를 제외하면, 라디오 자체의 보급률은 더욱 낮아진다. 게다가 1대 당 인구 수가 50 이하로 나타난 충남, 경기도는 스피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데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결국 1960년대 초 전국 라디오 보급률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극빈 부락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농어촌의 라디오 보급률은 더 낮아진다. 공보부는 라디오 보급 현황을 조사하면서, 별도로 극빈 부락의 전기 공급, 신문·라디오 보유 여부를 파악했다. 면(동)을 기준으로 자력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5개의 리를 하나의 극빈 부락으로 지정했다. 조사 결과 서울의 극빈 부락은 총 45개였다. 이 중에서 라디오가 없는 부락은 단 네 곳에 불과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에만 해당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농어촌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어땠을까? 특히 <표 1>에서 라디오 보급률이 가장 낮았던 전라남도에는 1,070개의 부락이 극빈으로 분류되었다. 3개 시 지역에서는 35개의 극빈 부락이 있었고, 단 18개 부락에 라디오가 없었다. 반면 21개 군 지역의 극빈 부락 중 580여 곳에 라디오가 없었다.⁴⁶ 이처럼 시 지역의 극빈 부락의 수는 농어촌으로 구분되는 군, 면 지역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났다. 게다가 극빈 부락이라 하더라도 라디오가 보급된 곳은 그 절반에 불과해 도시의 라디오 보급률은 농어촌에 비해 상당히 높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군이나 면은 상당수가 극빈 부락으로 포함되었다. 대체로 라디오가 없는 부락이 더 많았다. 이는 농어촌에 라디오가 거의 유입되지 않은 당시의 실태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렇게 농어촌 지역에서 라디오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한 박정희 정부는 농어촌 공보 강화를 위해 라디오를 대량 확보할 새로운 대안을

46 전기 공급에서도 도시와 농어촌은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의 극빈 부락은 단 4곳만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 반면에 전라남도에는 1,070개 부락 중 109개 부락만 전기가 공급되었다. 공보부 조사국, 『전국 극빈부락 실태보고서』(공보부, 1961), 7-12, 283-370.

강구해야 했다.

4. 농어촌으로의 라디오 보급과 확산

1962년 7월 15일 각 일간지에서는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 실시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후라 공보부 실장은 “공보부에서는 라디오 없는 농어촌을 일소키 위해 농어촌에 라디오를 보내자는 구호 아래 14일부터 범국민 운동을 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⁴⁷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 부부가 사용하던 라디오 3대를 공보부에 기탁한 것을 기점으로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⁴⁸ 이에 발맞춰 농어촌에 라디오를 보내기 위한 현금 기부 및 라디오 기증 운동이 일어났다.

농어촌에 라디오를 보내려는 정부의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운동’의 형태로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농어촌 지역의 유선 방송 신청 결과를 보면, 공보부라는 하나의 부처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라디오가 필요했다. 이에 공보부는 농어촌 라디오 보급 계획을 정부의 무상 보급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적 운동의 형태로 변경한 것이다.

언론 보도 이후,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 요강은 7월 20일 처음 작성되었고 약 2개월에 걸쳐 라디오를 모으는 방안이 구체화되었다.⁴⁹ 처음부터 공보부는 농어촌에 대한 공보 강화를 위해 라디오 보급을 꾀했다. 하지만 모집 요강 계획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공식적인 사업 목적에는 “귀가 있어도 가난하여 문화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농어촌에 온 국민이 합심하여 라디오와 앰프를 보내는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다”라고만 기술되어 있었다. 이는 7월 26일에 작성된 문서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⁵⁰ 오로지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에 대한 배려 차원의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47 “농어촌 마을에 라디오 보내기”, 『경향신문』, 1962. 7. 15; “활기 띠는 라디오 모으기”, 『동아일보』, 1962. 7. 15.

48 공보부,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의 라디오 보내기 범국민운동 계획 (제77회)”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BG0000309, 1962).

49 공보부, “농어촌 라디오 앰프 보내기 범국민운동 각의보고”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BA0084327, 1962).

50 같은 자료. 강조는 필자.

다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귀가 있어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방송 문화의 혜택을 입지 못함으로써 소외되고 있는 메마른 산간벽촌 및 어촌 부락에 한 대의 수신기라도 보내어 국가 재건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국가 의식의 거행과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 13일 대통령직무대행 국가재건 최고위원 박정희 의장과 육여사의 <트란지스타 라디오> 기증을 시초로 농어촌 라디오 및 엠프보내기 범국민 운동을 발족한 바 불과 2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무상 3,505대(9월 17일 현재)라는 라디오가 수집되어 뜨거운 동포애가 발현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수신기없는 자연부락이 15,000여나 되어 동일소를 위한 15,000여대의 수집 보급은 요원하다.

이에 동운동의 거국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전 공무원 및 전 국영 기업체 직원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 전 국가 공무원 및 각 지방공무원과 전국 공기업체 직원이 솔선수범하여 이에 참여함으로써 동운동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⁵¹

그런데 농어촌에 대한 배려라는 서술은 1962년 9월부터 완전히 변모했다. 위에 인용한 9월 18일 회의 문서를 보면, 라디오는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이자 군사 정부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처음 언론에 보도될 때 배려를 호소한 정부의 발표로는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의 목표 및 방향을 명확히 드러내 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정희의 솔선수범을 언급해 각 부처의 참여를 유도했다. 실제로 공보부가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주관하고 있지만, 이 전국민적 운동은 전 부처의 협력이 요구된 대형 사업이었다.⁵² 모든 관계 부처의 협조 속에 공보부는 라디오의 확보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

그렇다면 공보부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 보낼 라디오를 어떻게 확보하려고 했을까? 우선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했다. 공보부를 운동 본부로 설치하고, 전국 도청과 지역 방송국 및 신문사를 지부로 활용했다. 운동 지부는 라디오 모집 및 배부 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방송사 및 신문사는 이 전 국민적 운동을 독려하는 슬로건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⁵³ 그런데 1960년

⁵¹ 공보부, 앞의 글 (각주 48). 강조는 필자

⁵²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서울시를 포함 외무부 외 총 19개 부처의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 담당자가 기재되어 있다. 같은 글.

⁵³ 정부가 제시한 슬로건은 “한 집에 한 대 이상의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를 농촌

대 초반 한국의 낙후된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이 라디오 기부에 선뜻 동조를 할 수 있었는가는 의문이다. 고가의 물품이었기에 그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거나 보유하던 라디오를 기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공보부는 다각도로 국민의 동조를 구하면서도, 가장 수월하고 확실한 라디오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방식은 바로 공무원의 봉급에서 일정 액수를 각출하는 것이었다. 공보부는 공무원 급여의 각출을 통한 라디오를 확보 계획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세웠다.⁵⁴ 국가 공무원과 국영 기업체 직원 총 269,557명에게 1회 한정으로 30원씩을 각출하고자 했다. 이 30원은 농어촌에 보급될 라디오 가격의 1.5% 수준이었다. 그러나 총 금액은 8,086,710원으로 약 4천대의 라디오를 구입할 수 있었다. 즉, 공무원 봉급에서의 각출로 필요한 라디오 1만 5천 대 중 25%에 달하는 규모를 감당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방안은 9월에 급여의 1%를 각출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고, 높은 급여를 받는 이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각출 예정 금액이 더 높아진 이들에게는 추가 납부를 요구했다. 그리고 기준 변경 후, 총액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공무원 인원이 증가해 초기 계획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거출되었을 것이다.⁵⁵ 이는 전 국민의 선의에 기대는 것보다 정부가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이었다.

한편, 9월 18일 문서에서 3,505대의 라디오가 수집되었다는 것은 대부분이 공무원의 급여 각출로 이뤄낸 성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하면 1962년 7-9월 사이의 라디오 보내기 운동은 전 국민이 아닌 공무원만의 모집 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급여 각출은 국민들에게 '선의'를 요구한 슬로건과 달리 실제로는 '강요'된 기부 방식이었다.

공보부가 농어촌에 라디오를 보급하는 두 번째 방식은 농업협동조합의 활용이었다. 라디오 보내기 운동에 대한 계획이 처음 수립되었을 무렵에는 농업협동조합이 거론되지 않았다. 그런데 8월부터 언론을 통해 운동 지부로서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공보부는 농업협동조합과 협력 체제를 구축

에 보내자”, “두메에 소식을 보내자”, “당신의 선의로 농어촌은 밝아진다”, “벽지의 내 고향에 라디오라도 한 대” 등이다. “활기치는 라디오 모으기”, 『동아일보』, 1962. 7. 15; “두메에 소식을 보내자(공보부)”, 『동아일보』, 1962. 7. 7; “당신의 선의로 농어촌은 밝아진다”, 『동아일보』, 1962. 7. 29; “벽지의 내 고향에 라디오라도 한 대”, 『동아일보』, 1962. 9. 10.

⁵⁴ 공보부, 앞의 글 (각주 48).

⁵⁵ 1962년 9월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의 수가 243,525명으로 7월에 비해 4,364명이 늘어났다. 국영 기업체 대상자는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글.

해, 2년 동안 연부 상환으로 모든 부락에서 트랜지스터 라디오 1대를 갖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⁵⁶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이 개입된 라디오 보급은 결국 농어촌 주민의 자력에 의한 보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각 마을에 배치된 라디오의 값은 개인이든 마을 공동이든 농어촌에 거주한 이들이 지불해야 했다. 게다가 작은 금액이지만 이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처음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 ‘도시에 거주하는 여유가 있는 이’에게 선의의 기부를 기대해 시작되었다면, 농업협동조합이 관여하면서 모집의 대상이 농어촌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농어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라디오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높아졌다.

세 번째 방식은 기업으로부터의 기증이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은 금성사였다. 금성사는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트랜지스터 라디오 T-604 5천대를 박정희 정부에 기증할 계획을 발표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래 라디오 보내기 운동과 별개의 계획이었다. 1962년 3월 금성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T-604 라디오를 처음 선물하면서 정부에 라디오 5천 대 기증을 약속했었다. 당시 군사 정변 1주년 기념으로 5월까지 라디오가 배부될 예정이었으나,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 시작된 7월에서야 이를 지킨 것이다.⁵⁷ 물론 이후에도 금성사는 지속적으로 라디오를 기증했다.

금성사는 라디오 기증으로 더 큰 기회를 획득했다. 금성사의 약속이 이행되고,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새로 구입하는 라디오는 금성사의 것으로 지정되었다.⁵⁸ 특히 라디오 T-604는 농어촌 보급용 라디오로 활용되었고, 금성사는 국가 사업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물론 금성사 이외에도 라디오를 기증하는 기업이 일부 있었다. 그럼에도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되는 기증의 횟수나 규모를 보면, 대중은 전자 산업의 대표적 기업으로 금성사를 인식하게 되었다.⁵⁹ 금성사가 얻은

56 “마을마다 라디오, 2년 연부로 알선”, 『동아일보』, 1962. 8. 10.

57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1962년 3월에 금성사가 라디오를 기증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 납품한 시기는 7월이었다. “시멘트 3만여톤 기증”, 『경향신문』, 1962. 3. 6; “박의장 찾아 양회등 기증”, 『동아일보』, 1962. 3. 6; “오천대를 무상배부”, 『동아일보』, 1962. 4. 21; 금성사, 『이십오년사』 (각주 25), 182쪽.

58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보관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금성사의 라디오로 지정되어 있었다. “오천대를 무상배부”, 『동아일보』, 1962. 4. 21; 공보부, “농어촌에 라디오 보내기 범국민 운동 결과보고”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BA0845733, 1962).

59 금성사의 라디오 광고는 ‘현대인의 벗 금성 라디오’라는 문구에서 ‘전기 없는 농어촌의 벗 금

가장 큰 혜택이었다.

네 번째 방식은 유명 인사들이 직접 공보부에 기부하는 것이었다. 1-10대의 라디오를 유명인이 직접 기부했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는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에 국민의 동조를 일부 얻는 데 기여가 있었다. 그런데 개인의 기부는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 그나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우는 유명인이거나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었다.⁶⁰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과는 별개로 농어촌 지역이 고향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라디오를 구매해 고향집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5. 라디오 보급 실태와 그 효과

공무원 봉급의 각출, 농업협동조합의 개입, 기업과 개인의 기부라는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정부문서, 농업협동조합의 기록과 금성사의 납품 명세표 등을 종합해 볼 때, 보급의 측면에서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 “농어촌에 라디오 보내기 범국민 운동 결과보고”에는 공보부가 운용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⁶¹ 1962년 12월 28일에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약 5개월에 걸쳐 5천여 대의 라디오를 전국에 보급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공보부에서 1963년에 발간한 『최고회의보』의 “혁명 2년간의 업적 개요”를 보면 라디오 보급량은 조금 더 늘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중간 집계된 결과이므로, 공보부의 성과는 『최고회의보』에 기재된 총 7,966대를 농어촌에 보급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⁶² 결과적으로 공보부를 거친 라디오 보급은 목표치의 절반 가량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962년에만 농업협동조합에서는 무상으로 2,999대, 조합 위탁 기금으로 8,299대의 라디오를 농어촌에 공급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⁶³ 즉

성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변화했다. 그리고 금성 계열 기업에서는 라디오 기증을 적극 알렸다. “현대인의 벗 금성 라디오”, 『경향신문』, 1962. 10. 8; “전기 없는 농어촌의 벗 금성 트랜지스터 라디오!”, 『경향신문』, 1962. 10. 18; “농촌에 라디오”, 『경향신문』, 1962. 11. 3.

⁶⁰ “미쓰코리아 서양 상금일부를 농촌에”, 『동아일보』, 1962. 8. 4; “박홍식씨가 2만원 라디오 보내기 축위에”, 『경향신문』, 1962. 8. 17; “라디오 5대 기탁”, 『경향신문』, 1962. 8. 19; “라디오 18대 기탁, 미군단 스씨가”, 『경향신문』, 1962. 10. 2.

⁶¹ 공보부, 앞의 글 (각주 58).

⁶² 임성희, “혁명 2년간의 업적 개요”, 『최고회의보』 21권 (공보부, 1963), 53-57.

농업협동조합을 거쳐 공급된 라디오는 약 1만 1천 대에 육박한다. 이는 공보부와 별도로 진행된 라디오 보급 성과로 1963년에는 그 숫자가 더욱 증가했다.⁶⁴ 이렇게 공보부에서 수집한 것과 농업협동조합을 거쳐 공급된 것을 더하면 1962년에 1만 9천 대에 달한다. 여기에 금성사가 기증한 5천 대를 더하면 약 2만 4천 대가 농어촌에 보급되었다. 박정희 정부가 1만 5천 대의 라디오를 자연 부락에 보급하겠다는 처음의 목표는 1962년 말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숫자만 보면, 라디오 없는 마을이 일거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으로 당시 한국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 자발적인 라디오 보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2>의 방송 수신기 증가율 대조표를 보면,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 전후 나타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적 운동으로 농어촌에 공식적으로 보급된 수량을 제외해도 전국에 라디오만 약 10만 대 이상이 증가했다.⁶⁵

표 2. 방송 수신기 증가율 대조표

	61년도 9월	63년도 1월	증가대수	증가율(%)
전축식 라디오	37,833	59,300	21,467	156.74
전기용 라디오	223,340	264,272	40,932	118.33
건전지식 라디오	99,735	92,852	-6,883	93.10
전기, 건전지 양용 라디오	32,422	37,713	5,291	116.32
트랜지스터	81,626	202,298	120,672	247.91
광석식 라디오	51,689	50,056	-1,633	96.84
스피커	107,740	544,600	436,860	505.48
총 수	634,385	1,251,091	616,706	197.21

출처: 공보부 조사국, 『전국 라디오 보급현황』 (공보부, 1963), 9.

우선 라디오 중 트랜지스터식 라디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표 2>를 보면 라디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금성사가 박정희 대통령과 공보부에 기증한 라디오는 트랜지스터식 라디오 T-604였다.⁶⁶ 여기에는 금성사의 의도가

63 농업협동중앙회, 『한국농협오년사』 (농업협동중앙회, 1966), 71.

64 농업협동조합에서는 구매 사업으로 1963년 7월까지 라디오 14,220대를 농어촌에 판매했다. 농업협동중앙회, “농업동향”, 『농업연감』 (농업협동중앙회, 1963), 230.

65 공보부 조사국, 『전국 라디오 보급현황』 (공보부, 1963), 9.

66 “오천대를 무상배부”, 『동아일보』, 1962. 4. 21.

반영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T-604 라디오를 통해 박정희 혹은 공보부와 연계 고리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에서 공보부가 보급에 활용한 라디오는 금성사의 트랜지스터 라디오 T-604였다. 납품 지정 품목이었다. 그 결과 금성사의 T-604가 농어촌에 적합한 라디오라는 대중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금성사는 신문 광고에 “농어촌에 적합한 라디오”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트랜지스터식 라디오의 판매에 박차를 가했다.⁶⁷ 반면 배터리를 구입해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건전지식 라디오와 기술적으로 낙후된 광석식 라디오의 숫자는 감소했다.

무엇보다 전체 라디오 보급률이 높아졌다. 사실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으로 보급된 라디오는 전체 라디오 증가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다. 1962년에만 농어촌에 보급한 라디오는 약 2만 4천대였으나, 트랜지스터 라디오만 약 12만대가 늘었다. 즉, 약 10만 대는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라디오를 구입한 숫자이다. 대부분 도시에서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농어촌에서는 대부분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구매했는데, 1962년에 비해 1963년에 판매된 라디오의 수는 약 3천 대 가량 증가했다.⁶⁸ 여전히 농어촌에서의 라디오 구매는 도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한편 라디오보다 스피커의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스피커 자체만으로는 방송 수신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스피커의 보급이 급증한 데에는 농어촌의 라디오 수신 방식이 한 대의 라디오에 여러 대의 스피커를 각 가정에 연결해서 공동 청취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보부는 스피커를 라디오와 유사한 수신 장치로 계산했다. 한편 스피커 약 40만대의 수요는 주로 농어촌에서 있었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도시에서는 학교 등 다수가 밀집된 장소에서만 스피커가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피커는 라디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당시 방송문화협회에서는 앰프와 스피커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는데, 앰프의 가격은 1만 2천원, 스피커는 케이스 포함 3백 원으로 책정했다.⁶⁹ 금성사 라디오가 대략 2천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농어촌의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피커를 선택했던 것이다.

67 “전기 없는 농어촌의 벗 금성 트랜지스터 라디오!” (각주 59).

68 농업협동중앙회, 『농업연감』 (농업협동중앙회, 1963), 230; 농업협동중앙회, 『한국농협오년사』 (농업협동중앙회, 1966), 71.

69 당시 거래된 스피커 가격은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퍼져갈 앰프촌”, 『동아일보』, 1962. 7. 19.

농어촌에 라디오를 보내는 움직임은 1963년에도 이어졌다. 공식적으로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의 종료가 선언된 것은 아니지만, 전년과 같은 국가적 운동과 같은 모습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 시기는 개인의 라디오 기증이 이어졌고 농어촌을 넘어 다양한 장소로 전달되었다.⁷⁰ 그렇지만 점차 라디오 기증이 감소하면서 이에 대한 언론 보도도 감소했다.

그렇다면 농어촌에 보급된 라디오는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농어촌의 라디오는 마을의 소유물로서 예상치 못한 효과를 낳았다. 이는 라디오가 불러온 변화라기보다 라디오에 대한 규제가 만든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평균 9-10개 부락 당 한 대의 라디오가 배부되었다.⁷¹ 이에 농어촌에 라디오가 보급되면 보관·관리할 가정이 까다로운 규정에 따라 선발되었다. 대가족 가정으로 부락의 중심부에 위치했을 때 우선 선정될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락 내 신망이 두터우며 청렴한 사람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부가되었다.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 이장 등은 처음부터 제외되었다.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쳐 라디오를 보급 받은 사람은 개인의 신상, 주소지가 기재된 보관증을 본부에 제출해야만 했다. 라디오와 관련해 고장,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보관자가 이를 별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해졌다. 마을 주민은 언제라도 해당 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했다.⁷²

농어촌에서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도 제약이 있었다. 보관증과 함께 배부된 준수 사항을 보면 라디오는 부락 전체의 공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개인의 선호가 아닌 마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라디오가 활용되어야 했다. 게다가 방송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준수 사항에 의하면 농어촌에 보급된 라디오로는 오로지 국영 방송인 KBS 제1방송만 청취가 가능했다.⁷³ 이 규정이 아니어도 농어촌 지역에서 KBS 제2방송을 직접 청취할 수 있게 된 것은 1971년

70 “지휘자 안익태씨 전선방문코 선물”, 『동아일보』, 1963. 1. 4; “라디오 20대를 기증 역도산, 이공보 찾아”, 『경향신문』, 1963. 1. 10; “파주군민에 라디오 미기갑사단서 백대”, 『동아일보』, 1963. 1. 15; “난류”, 『동아일보』, 1963. 1. 23; “전선장병을 위문”, 『경향신문』, 2913. 2. 13; “춘신과 함께 선물 한아름”, 『동아일보』, 1963. 2. 13; “양로원에 보내 달라 기은서 라디오 기탁”, 『경향신문』, 1963. 12. 2.

71 경상북도 기획관리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BA0181042, 1962).

72 경보부, “농어촌에 라디오 보내기 범국민 운동 결과보고”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BA0845733, 1962).

73 같은 글.

인천 소래 송신소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이전까지는 제2방송 중 농어촌, 외국어 강좌, 학교 방송에 한해 각 지역 방송국이 일부 중계했다. 게다가 지역 방송국마다 제2방송의 중계 시간은 천차만별이었다.⁷⁴ 이렇게 방송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농어촌 지역에 보급된 라디오로는 오로지 국영 방송 KBS의 방송만 청취가 가능했다.⁷⁵ 정부의 공보 방송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무조건 청취해야 했다. 라디오를 끄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방송을 청취했다고 해서 그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었다. 개인 사정으로 정규 방송을 청취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부락민 상호 간에 널리 알려야 했다. 게다가 라디오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라디오를 반환해야 했다. 박정희 정부가 보급한 라디오로는 청취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라디오 관리부터 청취까지 농어촌의 라디오는 직접 통제 하에 있었다.

그렇다면 농어촌의 라디오는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우선 농어촌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지 못하던 폐쇄적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1962년과 1965년 공보부의 전국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먼 지역의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급감했다. 이는 과거 박정희의 시찰 당시 사회, 정치와 무관한 모습을 드러냈던 농어촌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데 있어 정보원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했다,⁷⁶ 타인에게서 정보를 얻는다는 비중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이는 28.7%에서 41.4%로 급증해 농어촌의 가장 효과적인 정보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 전후로 농어촌 방송이 더욱 강화되었다. 우선 농어촌 전용 프로그램의 숫자와 시간이 증가했다. 1960년대 KBS의 종목별 방송 편성 시간을 보면 음악·오락 23.3%, 교양 21.7%, 농사 지도 13.3%, 뉴스 8.3%로 나타났다. 주간 편성 시간으로 보면 평균 10시간 10분으로, 일시적이지만 최대 35시간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라디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부터 방송된 “농민 여러분에게”와 “어민 여러분에게”가 1962년 2월부터 “농어촌의 아침”이라는 한 프로그램으로 합쳐졌고, “농어촌의 아침”은 “농민의 시간”으로 이름이 바

74 한국방송공사, 앞의 책 (각주 27), 394-395.

75 공보부, 앞의 글 (각주 72).

76 공보부의 여론 조사는 서울, 시, 읍, 면 지역을 구분해 실시되었다. 공보부, 『전국 국민 여론 조사 결과 보고서』 (공보부, 1962), 27과 공보부 조사국, 『국내 정세에 대한 전국 국민 여론 조사 결과』 (공보부, 1965), 33을 김영희, 앞의 글 (각주 2), 151-152에서 재인용.

뀌면서 35분에서 1시간 25분으로 방송시간이 늘어났을 뿐이다.⁷⁷ 농어촌 대상의 방송은 박정희 정부의 공보와 함께 점차 중요 방송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남양 송신소가 완공되면서 농촌과 도시의 주파수가 다르게 운용되었다. 점차 라디오는 도시와 농촌의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첨단 매체가 되었다. 주파수가 달라지면서 도시와 농촌의 청취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 결과, 농어촌 전용 프로그램의 종류나 시간이 증가될수록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삶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라디오가 보급되기 전에는 방송 청취의 가능 여부로 도시와 농어촌의 모습이 달랐다. 그런데 1962년 8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농촌 방송이 시작되었고, 라디오 프로그램이 개편되었다. 이를 계기로 KBS 제1방송은 농어촌 중심의 전국 방송으로, 제2방송은 도시 방송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⁷⁸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 50분에 “농어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농가 토론, 라디오 농업 학교, 농사 상담, 살아있는 상록수, 청년 부녀의 시간, 토지 개량의 시간, 농촌 진흥의 시간 등의 코너로 구성되었다.⁷⁹ 음악, 라디오 드라마 등 오락 위주의 프로그램이 방송된 도시의 모습과 구별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도시는 네 개 방송 중 취사선택해 선호에 따라 청취할 수 있었다.⁸⁰ 그러나 농어촌은 선택지가 없었다.

한편 라디오는 성인의 재교육을 유도했다. 대표적으로 “농가방송 토론 그룹 시간”은 농어촌의 사회 교육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방송 프로그램이었다. 사전 교육, 집단 청취 후 토론, 결과 보고 등의 방식으로, 농어업에 있어 새로운 기술이나 방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습 효과를 확인했다.⁸¹ 이렇게 도시의 라디오는 즐거움의 수단이었다면, 농어촌의 라디오는 새로운 학습 도구로 활용되었다.

77 농민의 시간의 세부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아침, 마을의 게시판, 농촌문고, 전원의 음악, 나의 수기(농촌 지도자의 체험담), 라디오 농업학교, 농사 상담, 라디오 수산 학교, 농촌 극장, 새나라 농촌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라디오 농업 학교는 농사 기술 지도를 목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라디오 수산 학교는 농림부 수산국의 협조를 얻어 방송되었다. 한국방송공사, 앞의 책 (각주 27), 414; 『우선 농촌프로 확충』, 『동아일보』, 1962. 2. 13.

78 “마을마다 라디오 2년 연부로 알선”, 『동아일보』, 1962. 8. 10.

79 “강화된 농촌방송”, 『경향신문』, 1962. 8. 7.

80 주창윤, “1960년 전후 라디오 문화의 형성 과정”, 한국방송학회 편, 『한국 방송의 사회문화사』 (각주 6), 249-282 중 257.

81 농가 방송 토론 그룹 프로그램의 주제 및 운영 방식은 윤상길, 앞의 책 (각주 6)에서 살펴볼 수 있다.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 가져온 또 하나의 변화는 전자 공업 기업으로서 금성사의 성장이다. 금성사는 판매 부실로 경영 위기에 직면했으나,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계기로 라디오 판매가 급증했다. 당시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에 힘입어 공급이 부족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수준이었다. 이에 금성사는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 물량을 일거에 없앨 수 있었고, 새로운 라디오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1961년 금성사의 라디오 재고는 약 8천 대였다.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으로 완전히 재고가 소진된 것은 진공관 라디오 A-401, A-402, 이동식 TP-701, TP-602, 트랜지스터 라디오 T-701, T-703 등이다. 이 라디오들이 소진되면서 금성사는 1962년 A-504, A-6012S, T-603, T-604, T-605, TP-603, TP-804 등 신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 특히 농어촌 라디오 운동에 힘입어 T-604는 3만 3천 1백 86대, T-602는 3만 3천 대가 팔렸다. 라디오 보내기 운동으로 라디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⁸² 그 결과 1962년 금성사 전체 매출액 약 4억 8천만 원 중 라디오는 약 3억 1천만 원으로 73.44%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⁸³

그렇다면 금성사는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혜택을 본 것인가?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의 주요 보급 품목은 트랜지스터 6석 라디오인 T-602, T-604였다. 금성사의 기록에 의하면 1962년 7월부터 12월까지 농협 7,524대, 공보부 및 내각 사무처 등 2,743대를 각각 납품했다.⁸⁴ 농협을 통해 판매된 7,524대는 15,968,540원이고, 공보부 및 내각 사무처에 판매된 2,743대는 6,075,900원이다. 즉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으로 납품한 라디오의 판매 금액은 2천 2백여만 원에 불과했다. 오히려 라디오 판매액 3억 1천만 원 중 2억 8천만 원은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계기로 발생한 경제적 이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으로 금성사가 얻은 최대의 효과는 국가적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 이미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금성사가 라디오 5천 대를 기증해 세간의 주목을 받으려 했어도 이는 단발성 이벤트에 불과해 쉽게 잊힐 수도 있었다. 그런데 기대치 않게 정부가 나서서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⁸² 금성사, 『이십오년사』 (각주 25), 185-188.

⁸³ 당시 라디오 다음으로 가장 많은 판매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전화기다. 전화기는 2만 6천 8백 대가 판매되었고, 그 액수는 6천 8백 41만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15.9%를 차지했다.

⁸⁴ 같은 책, 188-189.

운동을 실시했고, 금성사로서는 큰 기회를 맞이했다.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으로 금성사의 라디오 판매가 호조를 이루면서 회사 자본금 또한 1962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⁸⁵ 이어 라디오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교환기 등의 개발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으로 금성사는 국가 사업에 기여하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했고, 라디오로 한국의 전자 공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6. 맺음말

1960년대 한국에서 대중 문화를 이끈 지배적인 매체는 라디오였다. 그리고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으로 첨단 산물인 라디오는 도시를 넘어 농어촌으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이 청취할 수 있는 방송은 달랐지만, 듣는 행위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진 라디오 방송에 대한 기억은 새로운 형태의 전 국민적 운동인 새마을 운동에 대한 거부감을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라디오는 1960년대 농어촌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은 박정희 정부 초기에 펼친 전 국민적 운동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약 반 년 동안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결과를 낸 성공적인 사례였다. 이 성공에 힘입어 1962년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은 1963년 농어촌 앰프 보내기 운동, 1965년 농어촌 스피커 보내기 운동으로 진화했다. 박정희 정부는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의 성과로 크고 작은 형태의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적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었다.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에는 당시로서는 첨단 과학기술 산물인 라디오가 수단으로 활용되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부가 첨단 과학기술의 전 국민적 보급을 목적으로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실시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의 수혜지역은 주로 농어촌이었다. 그런데 농림부가 아닌 공보부가 이 운동을 주도했다. 여기에는 농어촌에 대한 최소한의 문화적 혜택이라고 알려진 이면에, 라디오를 활용한 정권의 국정홍보라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라디오의 신속성과 동시성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첨단 과학기술 산물로서 라디오에 관심을

⁸⁵ 같은 책, 271.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어촌 라디오 보급이라는 목표가 성공적인 형태로 마무리되면서 박정희 정부의 라디오에 대한 관심도 사그라졌다.

한편, 농어촌 라디오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로부터의 강요가 있었다. 당시 대다수 농어촌 마을은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아, 전자 제품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시기에 라디오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공간은 농어촌이 아닌 도시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라디오는 단 기간에 농어촌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렇게 농어촌 마을마다 라디오가 1대씩 보급되면서 라디오 소리를 처음 경험했다. 내용이나 방식은 다르지만 전 국민이 라디오 소리를 공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들을 수 있는 방송의 종류는 도시와 농촌이 달랐다. 도시에서는 방송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오락과 교양을 제공하는 방송을 청취했다. 그러나 농어촌에서는 송신소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KBS 제1방송의 농촌 방송 위주로 들어야만 했고, 학습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만 했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의 활용에 따라 오락을 즐기는 도시와 학습하는 농어촌으로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그렇다면 한국 전자 산업의 역사에서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는 어떻게 위치지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제대로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오히려 1959년 금성사의 A-501 개발 이후 1969년 사이를 공백기로 서술하는 사례가 더 많다. 게다가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은 전자 공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사업이 아니다. 오히려 라디오라는 첨단 기술이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이용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1960년대 한국 전자 산업은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으로 명맥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전 국민적 운동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곳은 농어촌보다 금성사였다. 금성사는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계기로 폐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당시 라디오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금성사를 제외하면 드물었다. 그러나 금성사가 생산한 라디오는 대부분 재고로 남으면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그런데 금성사가 라디오 기증을 통해 박정희 정부의 국가적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되면서, 확실한 라디오 판로를 확보했다. 이렇게 금성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금성사의 위기 탈피는 라디오 위주의 전자 공업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는 데 기여했다.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은 라디오만 보급되면 일단락될 계획이

었다. 그런데 라디오 보내기 운동에 힘입어 금성사는 폐업 위기에서 라디오 산업을 넘어 전자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라디오를 경험한 대중은 선풍기, 냉장고, TV 등 새로운 전자 제품을 소비하기 시작했다. 대중은 점차 금성사를 한국 전자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은 금성사의 회생과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의 전자 산업이 사장되지 않고 연장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즉, 한국 전자 산업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한국 전자 공업의 역사에서 1962-1963년은 공백기가 아니었으며, 새로운 기술 개발의 토대가 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투고: 2016년 10월 4일, 심사 완료: 2016년 12월 13일, 게재 확정: 2016년 12월 14일)

The Politics of Radio: The Campaign to Send Radios to Rural Villages in the 1960s

KIM hi suk(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dominant medium of mass communic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during the 1960s was the radio. The radio set infiltrated all corners of the country, cities and villages alike, and the entire populace listened in on radio broadcasts. This trend was in fact strongly influenced by a social program for sending radios to fishing and farming villages, initiated by the Park Chung Hee regime. Why had the radios been selected for distribution? And how were radio sets disseminated to these villages?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backdrop to the radio distribution program, the process in which the initiative transformed into a nation-wide movement, the method of radio set distribution, and the effects observed in its aftermath.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dio distribution program had been prompted in order to effectively communicate the Park regime's official statements. Also, the plan for disseminating free radios was a movement of a hierarchical nature in which the entire populace was mobilized. Furthermore, the dissemination of radios had the effect of differentiating lifestyles—whereas the city enjoyed the radio as a form of entertainment, it was a medium for education and learning in the rural areas. Lastly, the radio dissemination movement prevented the domestic electronics industry from idling, and provided it with a survival opportunity.

Keywords. The Campaign of Sending Radios to Rural Villages, radio distribution program, dissemination, electronics industry